



## EAI 여론브리핑 제26호 (2008. 4. 12)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2008)

2008 총선패널조사 D+1 2차 조사 분석



### “총선 후 정국 : 화합형 리더십 필요성”

[목 차]

- |                                 |                    |
|---------------------------------|--------------------|
| 1. 분할투표로 본 총선 민심 (2p)           | 김민전(패널위원, 경희대)     |
| 2. 투표율 하락의 교훈, 숨어있는 기권자 민심 (5p) | 이현우(패널위원, 서강대)     |
| 3.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와 이대통령 리더십 (7p)  | 서현진(패널위원, 성신여대)    |
| 4.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강한 경계심 (9p)   | 유성진(패널위원, 이대정외과BK) |
| 5. 총선패널조사 기초 분석안 (12p)          | 정한울(패널위원, EAI)     |

- 기 획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 후 원 : SBS · 중앙일보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 표 본 : [대선패널]
  - 1차 패널 3,503명(2007. 4.25-4.28)
  - 2차 패널 2,911명, 유지율 83.1%(2007. 8.10-8. 13)
  - 3차 패널 2,524명, 유지율 72.1%(2007.10.17-10.20)
  - 4차 패널 2,382명, 유지율 68.0%(2007.11.25-11.27)
  - 5차 패널 2,208명, 유지율 63.0%(2007.12.11-12.12)
  - 6차 패널 2,111명, 유지율 60.3%(2007.12.20-12.21)
- [총선패널]
  - 1차 패널 1,370명(2008. 3.16-18)
  - 2차 패널 1,153명, 유지율 84.2%(2008. 4.10-11) 95% 신뢰수준, ±2.9%
- 표본추출 : 지역 · 성 · 연령별 쿼터 할당 후 6차까지 대선패널조사에 참여했던 2111명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1300명 규모의 총선패널조사 참여 패널을 모집함.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 · 성별 · 세대 · 학력별 가중치 부여

#### [총선패널연구팀]

- 위원장 이내영(위원장,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위 원 강원택(EAI시민정치패널위원장, 숭실대), 권혁용(고려대), 김민전(경희대), 김성태(고려대), 박찬욱(서울대), 서현진(성신여대), 유성진(이화여대BK21), 이숙종(EAI 원장), 이현우(EAI패널조사 질문지팀장, 서강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진영재(연세대), 신창운(중앙일보 전문위원), 현경보(SBS 차장), 김춘석(한국리서치 부장), 박종선(한국리서치 차장), 정한울(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간 사 곽소희(EAI 연구원)



## 분할투표로 본 총선 민심

김민전(경희대)

- 황금분할-친박연대 선전, 분할투표로 가능
- 한나라당 지지자-비례투표에선 친박연대지지 10.4%  
친박연대 지지자-지역투표에서 한나라당지지 43.9%

다수의 예상을 크게 빗나간 선거결과와 선거이후의 정치세력간의 갈등관계에 대한 여론의 주목으로 인해 이번 선거결과 중 미처 주목받지 못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당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는 득표율을 보인 반면, 친박연대는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지역구투표와 비례대표의 불일치현상은 거대정당과 지역적으로 표가 집중된 정당에 우호적인 소선거구제도의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은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를 분할해 투표(split voting)하는데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총선패널조사에 나타난 각 정당의 정당지지율과 지역구에서 투표한 정당의 비율, 그리고 정당투표에서 투표한 정당의 비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거대정당은 지역구의 득표율이 높고 군소정당은 정당투표에서 조금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은 [그림 2]에서 구할 수 있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80.5%가 한나라당 소속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정당투표에서는 73.9%의 응답자만이 한나라당에 투표하고 10.4%는 친박연대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친박연대의 지지자의 43.9%가 지역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친박연대에 투표한 응답자는 친박연대 지지자의 18.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박연대 지지자들의 정당투표에 있어서는 86.5%가 친박연대를 지지한 반면,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3.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친박연대로, 친박연대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지역구투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으로 분할 투표한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자중 친박연대에 정당투표한 유권자들의 특징은 선거에 관심이 많고,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고, 정부의 독주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고, 인터넷매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응답자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물론,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자만 분할투표를 한 것은 아니다. [표 2]에서 드러나듯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1%의 응답자가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군소정당이나 무당파층의 분할투표의 비율은 평균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소정당의 경우 정당투표를 한 정당의 후보가 지역구 후보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정당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소극적 분할투표와 보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인물에 투표하려는 적극적인 분할투표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자신의 이념을 중도라고 대답하고 있는 유권자들, 현직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분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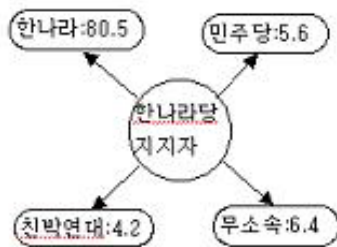
[그림 1] 정당지지율, 지역구에서 투표한 정당의 비율, 비례대표에서 투표한 정당의 비율



[그림2] 한나라당 및 친박연대 지지자들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현황

<지역구 투표>

<전국구투표>





[표 1]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총선이슈별, 인터넷매체접촉빈도별 분할투표 비율

항목	구분	일체투표	분할투표	χ-square
한반도대운하	찬성	52.6	25.0	0.00
	반대	34.6	66.4	
	모름	12.8	8.6	
	계	100	100	
정부독주	안정	81.7	64.0	0.00
	견제	8.7	10.1	
	모름	9.6	25.9	
	계	100	100	
인터넷매체 접촉빈도	거의매일	24.4	23.7	0.04
	3-4일	10.9	13.7	
	1-2일	12.5	21.6	
	전혀보지않음	52.5	41.0	
	계	100	100	

[표 2] 정당지지자별 분할투표 비율

구분	한나라	민주	민노	선진	창조한국	진보신당	친박연대	기타정당	무당파	계
분할투표	30.8	27.5	56.2	34.4	88.2	74.3	74.3	100	48.3	41.0
일체투표	69.2	72.5	43.8	65.6	11.8	11.8	25.7	0	51.7	58.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 이념성향, 현직의정평가와 분할투표

항목	구분	일체투표	분할투표	계	χ-square
이념성향	진보	59.9	40.1	100	0.02
	중도	51.6	48.4	100	
	보수	62.8	37.2	100	
현직의정평가	긍정	66.9	33.1	100	0.01
	부정	54.7	45.3	100	



## 투표율 하락의 교훈 숨어있는 기권자 민심도 간과해서는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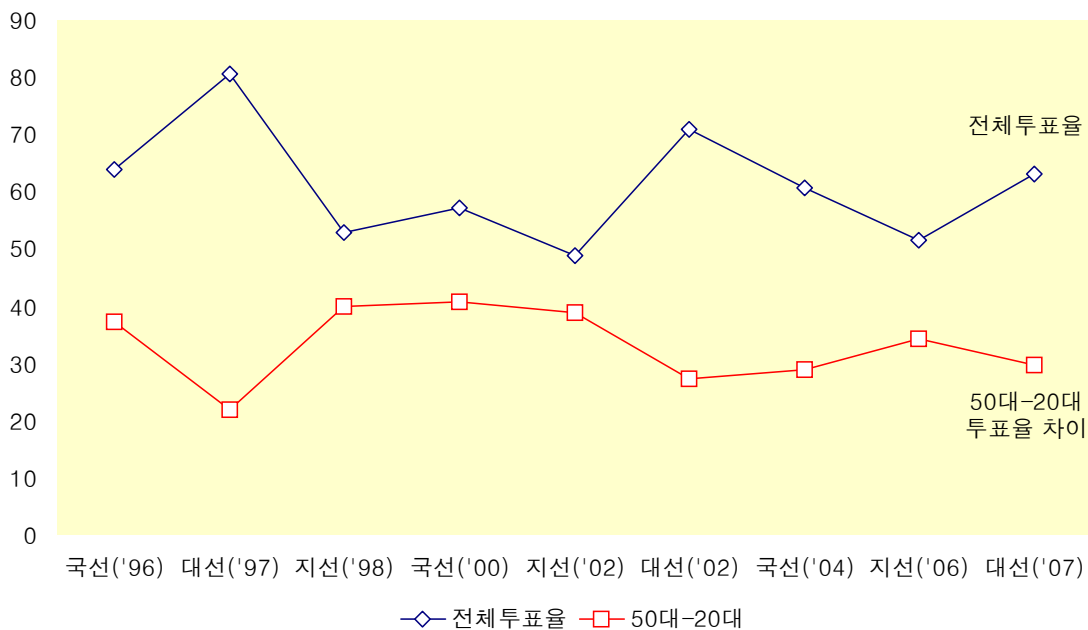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 기권자 투표시 시뮬레이션 결과, 한나라당 과반의석 흔들려
- 정당투표 3석 감소, 친박연대 의석 2석 감소, 창조한국당 민노당 각 1석 추가, 진보신당 3석 가능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63%의 투표율이 낮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80%가 넘고, 지속적인 투표율 감소를 우려하는 국민이 90%에 달했지만 이번 총선투표율은 46%로 최저를 기록했다. ‘정치인은 당선된 후 행동이 선거 때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93.3%에 이르고, ‘소수의 사람들이 정부와 정치를 좌우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81%가 넘는 정치불신의 결과가 이번의 낮은 투표율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투표율 저하는 집단별 투표율 차이를 크게 한다는 점에서 대표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연령별 투표율은 더 벌어진다. 투표율이 80.7%에 달했던 97년 대선에서는 20대와 50대의 투표율 차이가 21.7%p였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68.2%에 머물렀고 두 연령 간에는 34.4%p의 투표율 차를 보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투표율이 50% 이하로 내려가면 연령별 투표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

[그림1] 1996년 이후 선거 투표율 및 50대-20대 투표율 격차 변화추이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기권한 이번 총선에서 기권자들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아야 하며, 그 방법으로 만일 그들이 모두 투표했다면 선거결과는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예측해 보는 것이다.

투표자와 기권자의 의견차가 몇 군데서 나타난다. 우선 기권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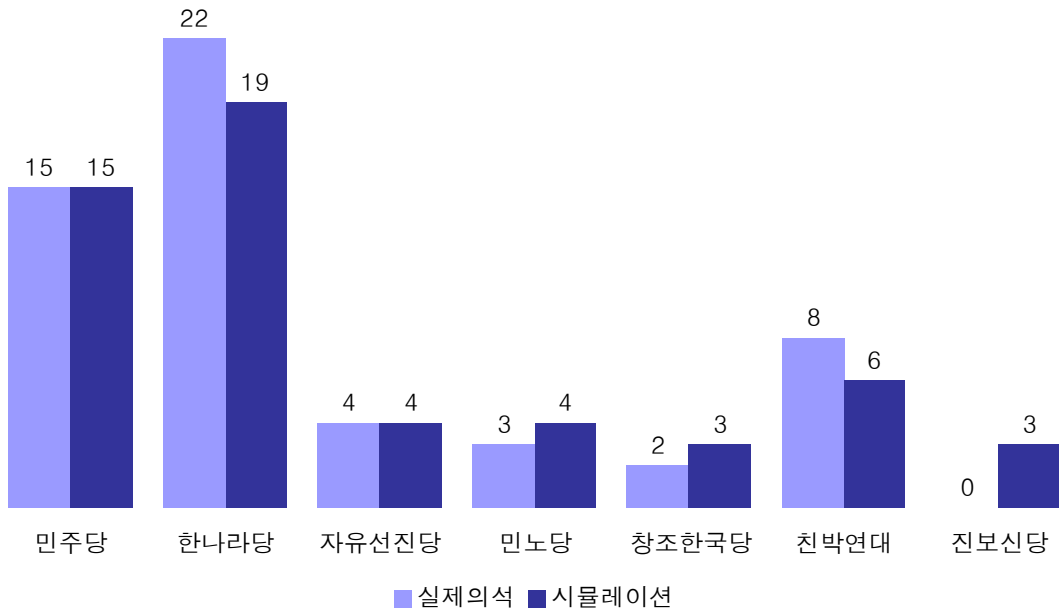
업무평가가 55%로 투표자들보다 10%p 이상 낮다. 기권자들 중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8.5%로 투표자의 44.8%에 비해 훨씬 낮다. 선거결과를 볼 때 행정부가 국회와 효율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비율도 기권자들이 13%p 낮다. 이처럼 기권자들은 여당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기권자들의 이념평균은 5.1점으로 투표자 이념평균에 비해 0.5점 낮다. 이들은 문국현, 손학규, 강금실, 정동영 등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투표자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5.6점으로 약간 긍정적이지만 투표자 평균보다 0.7점 낮다. 따라서 이들 기권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면 선거를 통한 국민의사는 상당부분 달라졌을 것이다.

표는 실제정당투표와 100% 투표를 가정한 의석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한나라당의 의석이 3석, 친박연대의 의석이 2석 감소하고 대신에 0.06%가 지지가 부족해서 한 석의 의석도 배분받지 못한 진보신당이 3석을 획득하고 창조한국당과 민주노동당도 각각 1석씩을 더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기권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 의석은 워낙 변수가 많아 100% 투표참여를 가정으로 의석분포를 계산할 수 없다.

낮은 투표율 덕분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선거결과에 도움을 받았지만 선거에 나타나지 않은 기권자들의 여당에 대한 정치 불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다수의 기권자들은 만족할만한 야당을 찾지 못해서 투표를 포기한 것이지 여당에 대한 잠재적 지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림 2] 기권자 투표참여 가정 정당투표 의석배분 시뮬레이션 결과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1.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와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과)

한나라당내 계파 간 공천 갈등의 결과 생성된 친박연대 당선자들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선택은 총선 이후 대통령과 여당의 정국운영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정당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후 친박연대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은 질문에 응답자의 33.3%가 한나라당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해 독자정당 창당(27.2%)이나 다른 정당과의 통합(17.3%) 의견보다 많았다. 향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안정감 있는 화합형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43.7%로 가장 많았고 강력한 국정추진형(23.4%)이나 실무 CEO형(29.2%)을 원하는 유권자 비율은 비슷했다.

특이한 것은 합의형이나 CEO형 리더십을 원하는 유권자보다 강력하게 국정을 추진해가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유권자 중에 한나라당 탈당파의 복당을 원하는 비율이 (46.6%)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의회 내 한나라당 의석 확대를 통해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 세력 확보를 기대하는 심리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표1>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와 향후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형태

리더십	진로			잘 모름	총계(%)
	한나라당 복당	다른 정당과 통합	독자정당 창당		
안정/합의형	32.8	18.5	28.4	20.3	<b>43.7</b>
강력한 국정추진형	<b>46.3</b>	15.2	24.4	14.1	<b>23.4</b>
실무적 CEO형	26.4	18.1	28.5	27.0	<b>29.2</b>
총계(%)	<b>33.3</b>	<b>17.3</b>	<b>27.2</b>	<b>22.2</b>	

<표2> 정당 지지자별 차이(%)

	한나라당 복당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형태		
		안정/합의형	강력한 국정추진형	실무 CEO형
통합 민주당	10.2	52.0	11.1	31.1
<b>한나라당</b>	<b>57.1</b>	<b>38.3</b>	<b>32.9</b>	<b>28.2</b>
민주노동당	6.1	52.4	14.4	23.4
자유선진당	10.0	27.8	37.2	32.1
창조한국당	6.7	39.7	20.1	29.9
진보신당	7.6	61.4	6.7	26.7
<b>친박연대</b>	<b>55.2</b>	<b>48.0</b>	<b>24.9</b>	<b>24.4</b>
지지정당 없음	10.8	44.0	15.8	35.1



정당지지자별로 보면, 다른 정당 지지자들과 달리 한나라당 지지자(57.1%)와 친박연대 지지자(55.2%) 과반수 이상이 이들이 복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와 친박연대 지지자 간 차이가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는 합의형 리더십(38.3%)과 강력한 리더십(32.9%)을 원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친박연대 지지자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24.9%)보다 합의형 리더십(48.0%)을 원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표3> 지역별 차이(%)

	한나라당 복당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형태		
		안정/합의형	강력한 국정추진형	실무 CEO형
서울	28.8	42.7	24.5	30.5
인천/경기	34.1	43.9	20.1	30.2
대전/충청	32.9	47.9	20.4	27.4
광주/전라	18.2	50.4	17.9	30.5
<b>대구/경북</b>	<b>55.1</b>	35.8	<b>34.8</b>	28.5
부산/울산/경남	34.7	41.8	25.8	27.4
제주/강원	29.3	47.5	22.2	26.5

지역별로도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대구/경북 유권자 중에 한나라당 복당을 원하는 비율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이 지역 유권자가 한나라당 복당에 가장 호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기반으로 친박연대 당선자들의 복당으로 한나라당내 박 전 대표의 입지 강화를 바라는 지역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응답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보면 앞서 언급한 탈당파의 한나라당 복당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연관성이 있음도 재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국민의 다수는 화합형 리더십을 원하고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원한다. 특이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다수의 응답자도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을 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탈당파의 한나라당 복당을 원하는 한나라당 지지자와 친박연대 지지자들, 그리고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형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들의 진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가장 바라는 화합의 리더십과 강력한 리더십이나 실무 CEO형 리더십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롭게 추구할 것인지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2.

### 한반도 대운하 밀어붙이기에 강한 경계심 강력한 추진력 보다 화합형 리더십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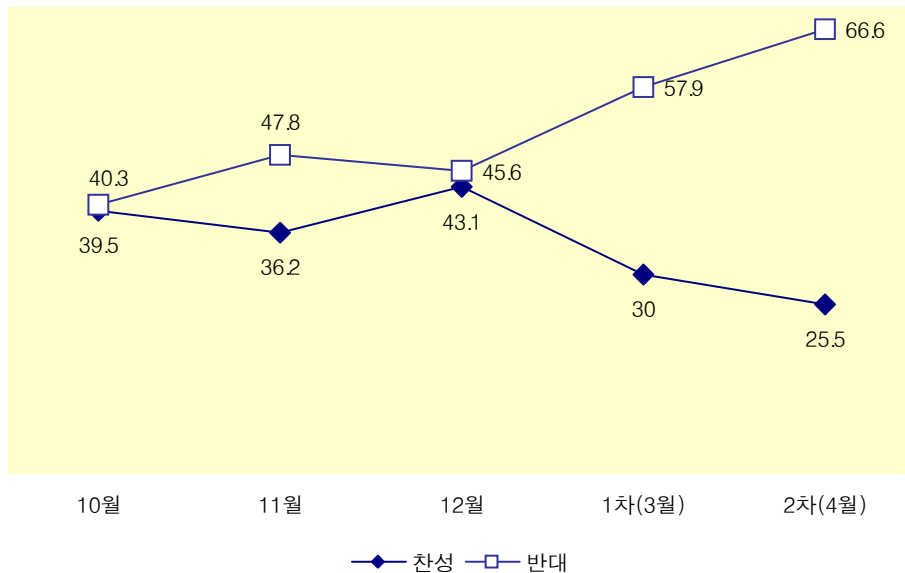
유성진(이화여대 정외과 BK21)

국민들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과반수 의석을 주면서 이명박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친박연대와 무소속 후보를, 충청에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천과정과 취임초기에 보여준 밀어붙이기식 정국운영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주었다. 총선 직후 실시한 패널조사 결과 총선 이후 정국의 핵심이슈로 등장할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대해 국민여론은 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 한반도 대운하 추진해야 하는가?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6.6%가 반대를 표명한 반면, 25.5%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지난 패널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대선 직후 43.1% 대 45.6%로 팽팽히 맞서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반여론은 총선 직전 30% 대 57.9%로 반대의견이 우세하기 시작했고, 이번 조사에서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져 3명 중 2명이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찬반여론 추이



주1. 대선패널 3차, 4차, 6차, 총선패널 1차, 2차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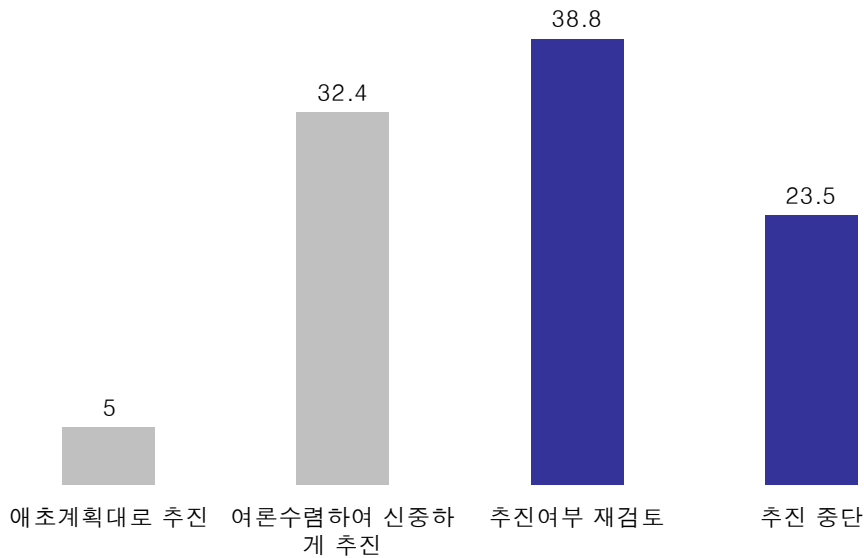
#### 한반도 대운하,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부정적 여론은 총선 이후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의견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2.3%가 추진여부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에 절반(32.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만이 대선 공약이므로 애초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사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그림 2]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



### 한반도 대운하와 대통령 리더십: 강력한 국정추진보다는 안정과 화합의 리더십 주문

한반도 대운하와 관한 이와 같은 여론은 이명박 대통령에 바라는 향후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다. 향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을 원하는지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7%가 안정감 있는 화합의 리더십을 요구한 반면, 강력한 국정추진형과 실무 CEO형의 리더십은 각각 23.4%, 29.2%로 나타나 국민의 다수가 안정과 화합의 대통령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하는 대통령 리더십에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의견도 크게 엇갈렸는데 안정감 있는 화합의 리더십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70% 가량이 사업추진여부 자체를 재검토 혹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강력한 국정추진형의 리더십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47%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사업추진 여부 자체의 재검토 혹은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43%)을 약간 웃돌았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점을 보였던 실무 CEO형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67.6%에 달해 안정감 있는 화합의 리더십을 요청한 응답자들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안정감 있는 화합형과 실무 CEO형의 리더십을 원하는 여론이 72%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결국 이번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심의 모습은 강력한 국정추진 보다는 안정과 화합의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 속에 정부의 정책추진방식에 관한 선호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총선결과에 나타난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고 정책에 반영할 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표 1] 바라는 대통령 리더십과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방식

리더십	추진방식 대선공약이므로 계획대로 추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	사업추진여부 재검토 혹은 사업추진 말아야	총계(%)
안정/화합형	3.4	27.9	68.3	<b>43.7</b>
강력한 국정추진형	9.3	47.2	43.1	<b>23.4</b>
실무적 CEO형	2.4	30.1	67.6	<b>29.2</b>
총계(%)	<b>5.0</b>	<b>32.4</b>	<b>62.3</b>	100



## 제2차 총선패널조사 기초 분석안

기대와 우려의 공존, 리더십 변화 절실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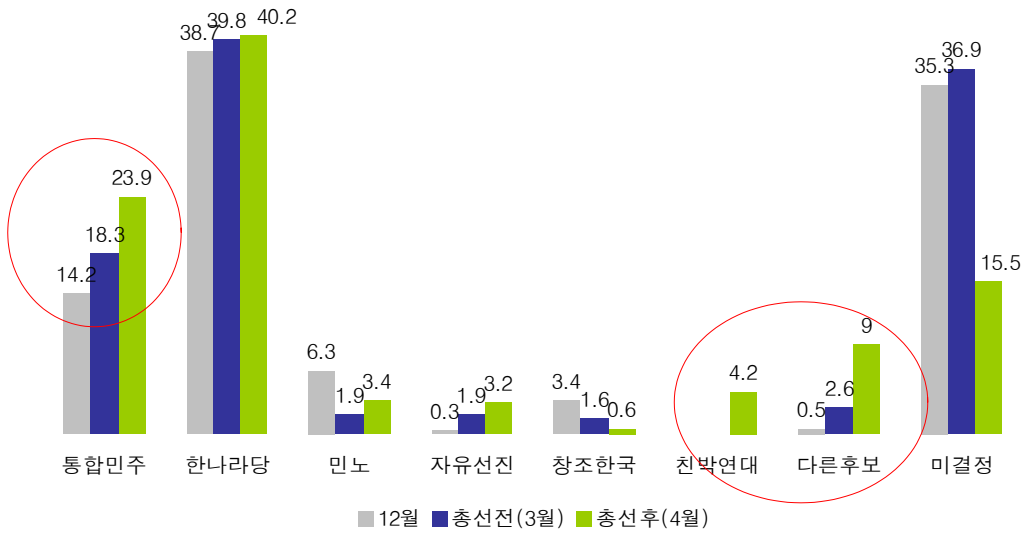
### 표심의 변동

#### □ 선거전후 패널조사로 본 총선지지도 후보 정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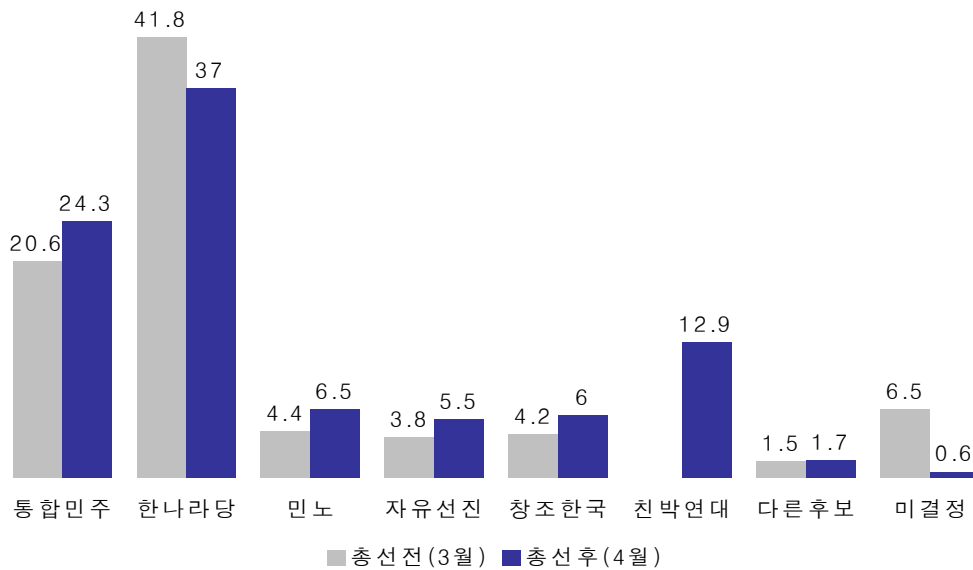
한나라당의 정체, 민주당 소폭 상승, 친박연대 및 민주노동당 일부 지역구 선전.

비례제에서는 한나라 소폭 하락, 민주당 소폭 상승, 친박연대 지지 상승(대구경북 30%)

[그림1] 지역구 총선지지도 변화 (12월대선 직후~ 총선직후)



[그림2] 비례제 정당투표 지지율 변화(총선 전 3월~ 총선 후)





□ 표의 이동 분석[1차 →2차]

- 민주당 후보 지지상승, 민노당 · 창조한국당 · 진보신당 지지층 흡수
- 미결정층/부동층을 흡수하는 데는 실패, 부동층의 기권 현상도 두드러져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지역구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높은 결집력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로 지지를 유지한 응답자가 68.8%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아직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층을 흡수하는 데서도 한나라당에 다소 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20-30%가량을 흡수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견제론을 앞세워 선거판세 변화를 꾀했던 민주당의 전략은 다른 진보개혁 정당 후보의 표를 모으는데 일정 성공했지만, 투표 미결정층이나 부동층 흡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의석 확대에 실패한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선 한나라당 지지자 중 17.3%가 친박연대 지지로 돌아서

한편 비례투표에서는 우선 1차조사 지지정당을 2차에서 교차한 비율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한나라당 정당지지를 했던 층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이나 실제 투표에서 정당투표로 이어진 비율은 각각 58.8%, 58.1%로 60%에 못 미쳤다. 특히 한나라당 정당투표자의 경우 2차 조사에서 친박연대 지지로 돌아선 응답자가 17.3%나 되었고, 이는 박연대 돌풍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건 정당투표건 1차 조사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던 미결정층에서 기권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대안의 부재가 문제였다.

[표1] 1차조사→2차조사 지역구 투표의 이동

		총선투표_기권포함											
		통합민주 당	한나라당	민주노 동당	자유선 진당	창조한 국당	진보 신당	친박 연대	다른 정당	무소 속	기권	모름/ 무응 답	Total
1차 조 사	통합민주 당후보	141	14	6	5	2	0	2	0	10	25	0	205
		68.8%	6.8%	2.9%	2.4%	1.0%	.0%	1.0%	.0%	4.9%	12.2%	.0%	100.0%
	한나라당 후보	22	335	7	4	0	0	19	0	21	47	1	456
		4.8%	73.5%	1.5%	.9%	.0%	.0%	4.2%	.0%	4.6%	10.3%	.2%	100.0%
	민주노동 당후보	8	2	8	0	0	1	1	0	2	2	0	24
		33.3%	8.3%	33.3%	.0%	.0%	4.2%	4.2%	.0%	8.3%	8.3%	.0%	100.0%
	자유선진 당후보	2	2	0	12	0	0	1	0	1	0	0	18
		11.1%	11.1%	.0%	66.7%	.0%	.0%	5.6%	.0%	5.6%	.0%	.0%	100.0%
	창조한국 당후보	4	3	1	2	1	0	0	0	2	5	0	18
		22.2%	16.7%	5.6%	11.1%	5.6%	.0%	.0%	.0%	11%	27.8%	.0%	100.0%
	진보신당 후보	1	1	1	0	0	0	0	0	1	1	0	5
		20.0%	20.0%	20.0%	.0%	.0%	.0%	.0%	.0%	20%	20.0%	.0%	100.0%
	다른정당 후보	3	0	0	0	0	0	0	0	0	0	0	3
		100.0%	.0%	.0%	.0%	.0%	.0%	.0%	.0%	.0%	.0%	.0%	100.0%
	무소속후 보	1	3	0	0	0	2	1	0	12	5	0	24
		4.2%	12.5%	.0%	.0%	.0%	8.3%	4.2%	.0%	50%	20.8%	.0%	100.0%
	투표할후 보가없다	6	4	1	0	0	0	0	0	3	7	2	23
		26.1%	17.4%	4.3%	.0%	.0%	.0%	.0%	.0%	13%	30.4%	8.7%	100.0%
	아직결정 하지못했 다	87	98	14	14	4	11	24	2	25	87	6	372
		23.4%	26.3%	3.8%	3.8%	1.1%	3.0%	6.5%	.5%	6.7%	23.4%	1.6%	100.0%
	(모름/ 무응 답	0	2	0	0	0	1	0	0	0	0	0	3
		.0%	66.7%	.0%	.0%	.0%	33.3%	.0%	.0%	.0%	.0%	.0%	100.0%
Total		275	464	38	37	7	15	48	2	77	179	9	1151
		23.9%	40.3%	3.3%	3.2%	.6%	1.3%	4.2%	.2%	6.7%	15.6%	.8%	100.0%



[표2] 1차 조사→2차 조사 정당투표의 이동

총선비례\_기권포함

		통합민 주당	한나라 당	민주노 동당	자유선 진당	창조한 국당	진보 신당	친박 연대	다른정 당	정당투 표하지 않음	기권	모름/ 무응 답	Total
1차 정당 투표	통합민주당	143	21	10	5	11	14	5	3	0	34	0	246
		58.1%	8.5%	4.1%	2.0%	4.5%	5.7%	2.0%	1.2%	.0%	13.8%	.0%	100.0%
	한나라당	24	278	9	11	8	3	82	6	3	48	1	473
		5.1%	58.8%	1.9%	2.3%	1.7%	.6%	17.3%	1.3%	.6%	10.1%	.2%	100.0%
	민주노동당	8	1	23	0	1	12	0	0	0	5	0	50
		16.0%	2.0%	46.0%	.0%	2.0%	24.0%	.0%	.0%	.0%	10.0%	.0%	100.0%
	자유선진당	3	1	0	21	0	1	11	1	0	5	0	43
		7.0%	2.3%	.0%	48.8%	.0%	2.3%	25.6%	2.3%	.0%	11.6%	.0%	100.0%
	창조한국당	10	3	4	0	19	1	0	0	0	10	0	47
		21.3%	6.4%	8.5%	.0%	40.4%	2.1%	.0%	.0%	.0%	21.3%	.0%	100.0%
	진보신당	0	2	0	1	0	5	3	0	0	1	0	12
		.0%	16.7%	.0%	8.3%	.0%	41.7%	25.0%	.0%	.0%	8.3%	.0%	100.0%
	다른정당	0	7	0	0	0	0	0	1	0	0	0	8
		.0%	87.5%	.0%	.0%	.0%	.0%	.0%	12.5%	.0%	.0%	.0%	100.0%
투표할정당 이없다	6	1	8	0	0	1	0	0	0	6	0	22	
	27.3%	4.5%	36.4%	.0%	.0%	4.5%	.0%	.0%	.0%	27.3%	.0%	100.0%	
아직결정하 지못했다	42	46	10	13	20	17	25	4	3	70	0	250	
	16.8%	18.4%	4.0%	5.2%	8.0%	6.8%	10.0%	1.6%	1.2%	28.0%	.0%	100.0%	
모름/ 무응답	1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100.0%	
Total		237	360	64	51	59	54	126	15	6	179	1	1152
		20.6%	31.3%	5.6%	4.4%	5.1%	4.7%	10.9%	1.3%	.5%	15.5%	.1%	100.0%



### 총선과정 평가

- 견제론 대 안정론 몰입 속에 선거 본연의 의미는 퇴색
- 정치적 의미 부여에 비해 대안 없으면 기권율 높아져

#### □ 18대 총선의 특징

견제론 안정론 / 지역주의 잔존-정책대결 약화 / 관건-비방선거는 개선  
민주당 견제론의 희망이 되기에는 역부족

#### □ 견제 균형론에 몰입된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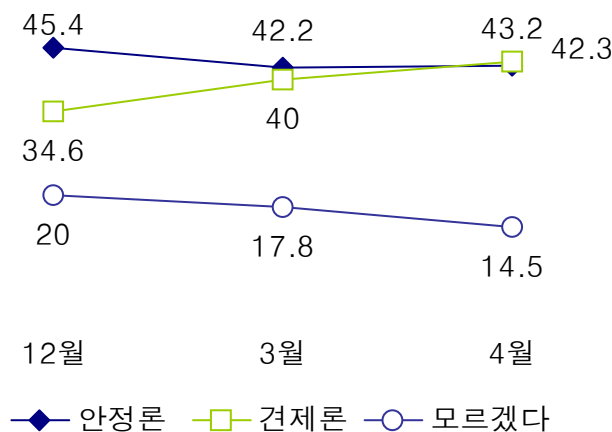
12월 대선직후 안정론이 견제론에 우세했던 것과 달리 총선에 들어와 3월에는 안정론과 견제론의 격차가 급격하게 근접했다. 그러나 총선직후 조사에서는 견제론이 43.2%, 안정론이 42.3%로 미세하게나마 역전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견제론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야당이 견제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견제론은 3월 조사에 비해 3.2%p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견제론자들의 경우 42.7%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여 견제론이 민주당 지지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론 입장에 따른 경우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하는 비율이 무려 72.9%에 달했다. 안정론의 대안이 한나라당으로 집중된 반면 민주당을 견제론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 차이가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율의 격차를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견제론자의 기권율이 안정론자의 기권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나 기타 야당이 판세를 전면적으로 뒤집지 못하고 과반의석을 한나라당에 허용해야 했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 □ 국민의 눈에 비친 18대 총선 평가 : “지역주의 완화” 45.9%, “정책선거였다” 40.9%

지역주의가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과반수에 못 미치는 45.9%만 동의하고, 정책대결 선거였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도 40.9%에 불과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비방이나 관권개입의 문제는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총선에 비해 비방이 심화된 선거라는 주장에 38%만이 동의를 하고 관권개입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에는 32.1%만이 동의하여 이전에 비해 부정적 평가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이러한 선거악폐가 과거에 비해 완화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견제균형론의 대결 속에 뚜렷한 쟁점과 긴장감 없이 선거가 진행된 탓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1] 견제론 대 안정론의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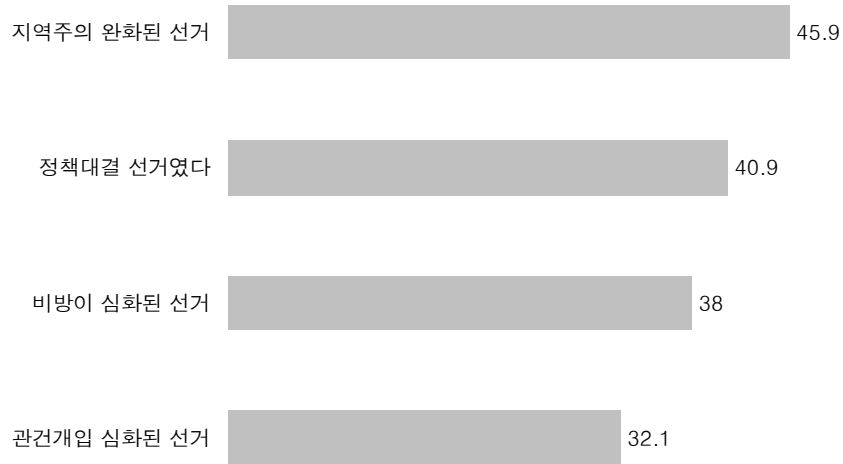


[표3] 견제론 대 안정론 별 총선투표

총선투표\_기권포함

	통합민주 당	한나 라당	민주노 동당	자유 선진 당	창조 한국 당	진보 신당	친박 연대	다른 정당	무소 속	기권	모름/ 무응답	Total
안정론	26 5.3%	355 72.9%	6 1.2%	7 1.4%	0 .0%	1 .2%	18 3.7%	0 .0%	23 4.7%	51 10%	0 .0%	487 100.0%
견제론	213 42.7%	53 10.6%	31 6.2%	25 5.0%	6 1.2%	15 3.0%	21 4.2%	2 .4%	33 3.6%	92 18%	8 1.6%	499 100.0%
잘 모르 겠다	36 21.6%	56 33.5%	2 1.2%	5 3.0%	0 .0%	0 .0%	10 6.0%	0 .0%	20 12%	36 22%	2 1.2%	167 100.0%
Total	275 23.9%	464 40.2%	39 3.4%	37 3.2%	6 .5%	16 1.4%	49 4.2%	2 .2%	76 3.6%	179 16%	10 .9%	1153 100.0%

[그림2] 18대 총선 과정 평가



□ 18대 총선거의 의미

현정부 정치판도 결정 29.2% > 지역일꾼 뽑는 선거 23.2% > 이명박 정부 평가 20.3% > 나라일꾼 뽑는 선거 20.2% > 노무현 정부 평가 5.4%[그림3]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에서 정책실종을 경고하면서 그 예로 견제론과 균형론의 선거캠페인이 선거를 압도한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지 물어본 결과 견제론과 균형론이 가장하듯이 현 정부 하에서의 정치판도를 결정하는 선거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았다.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응답이 23.2%, 나라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응답이 20.2% 이명박 정부평가라는 응답이 20.3%로 뒤를 이었다. 한편 노무현 정부 평가의 계기였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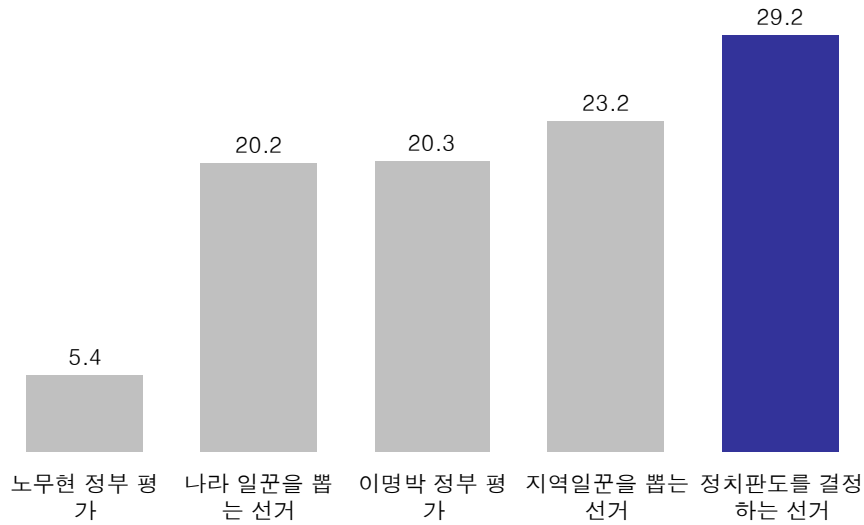




□ 다양한 선거수요 존재, 수요에 맞는 선거상품 개발에 실패한 정치권

견제균형론 대결이 부각되면서 현 정부 정치판도 결정의 관점에서 총선을 바라보는 입장이 가장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가 30%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을 견제와 균형이 아닌 다른 시선에서 접근했던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의 경우 거리감을 갖게 만드는 선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새로운 일꾼을 선출한다는 규범적 입장에서 선거를 바라본 유권자들의 경우 선거과정이 이러한 취지와 동떨어진 상태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표3].

[그림3] 18대 총선의 의미



[표4] 총선의 의미별 총선투표

		총선투표_기권포함											
		통합민	민주노	자유선	창조한	진보신	친박연	다른	무소	모름			
		주당	한나라당	동당	진당	국당	당	대	정당	속	기권	무응답	Total
총 선 의 의 미	노무현정부 대한평가	9	30	0	5	0	0	0	0	1	15	1	61
		14.8%	49.2%	.0%	8.2%	.0%	.0%	.0%	.0%	1.6%	24.6%	1.6%	00.0%
	이명박정부 대한평가	56	117	8	6	1	2	11	1	13	21	0	236
		23.7%	49.6%	3.4%	2.5%	.4%	.8%	4.7%	.4%	5.5%	8.9%	.0%	00.0%
	지역일꾼을 뽑는선거	60	108	13	6	2	9	11	0	36	22	2	269
		22.3%	40.1%	4.8%	2.2%	.7%	3.3%	4.1%	.0%	3.4%	8.2%	.7%	00.0%
	나라전체의 일꾼을뽑는선	58	107	8	3	2	0	5	0	14	36	1	234
		24.8%	45.7%	3.4%	1.3%	.9%	.0%	2.1%	.0%	6.0%	15.4%	.4%	00.0%
	현정부에서 정치판도를	80	101	11	16	2	5	22	1	13	80	5	336
		23.8%	30.1%	3.3%	4.8%	.6%	1.5%	6.5%	.3%	3.9%	23.8%	1.5%	00.0%
	모름/ 무응답	12	1	0	1	0	0	0	0	0	5	0	19
		63.2%	5.3%	.0%	5.3%	.0%	.0%	.0%	.0%	.0%	16.3%	.0%	00.0%
Total		275	464	40	37	7	16	49	2	77	179	9	1155
		23.8%	40.2%	3.5%	3.2%	.6%	1.4%	4.2%	.2%	6.7%	15.5%	.8%	00.0%



□ 높은 기권율은 왜?

하지만 현 정부 정치판도를 결정하는 선거라든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등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층에서 기권율이 높았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높은 정치적 의미와 기대를 부여한 유권자들의 경우 정치적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대안을 찾지 못한 견제론자들과 견제론과 안정론 중 어느 입장을 택하지 못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투표기권이 높았음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총선결과에 대한 평가 : 만족 과 불만이 팽팽**

- 전체국민 평가 반반 갈려
-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자는 지지정당의 지도부와 총선평가 엇갈려
- 보수성향 지지자, 웃고 : 한나라, 친박연대 지지자 만족도 평균 웃돌아
- 진보성향, 무당파 지지자 울고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진보개혁성향 정당 지지자 만족도 낮아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등을 얻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춘 이번 선거결과에 유권자들의 평가도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52.9%,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46.5%였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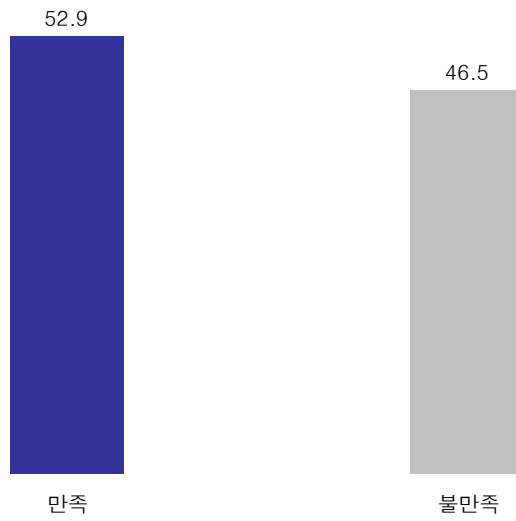
그러나 지지정당별로 보면 유권자들의 평가는 각 정당의 반응과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과반수를 획득했지만 영남에서 친박연대에 의석을 내주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이방호 의원이 패배하면서 침통해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달리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75.2%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있다. 수도권 패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81석의 의석을 확보하여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통합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불과 27.9%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성향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거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진보개혁 성향의 정당 지지자들은 선거결과에 냉담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남권에서의 승리로 주목받고 있는 친박연대 지지자들은 68.2%가 만족한다고 대답하였고, 원내 교섭단체구성에는 실패했지만 충남이라는 지역기반을 확보한 자유선진당 지지자는 절반정도(44.5%)가 선거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회찬, 심상정 의원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한 석도 갖지 못한 진보신당 지지자는 23.4%, 문국현 후보 등 3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든 창조한국당 지지자는 24.8%만이 선거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지자 역시 33.5%만이 선거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쳤지만, 권영길, 강기갑 후보의 당선으로 다른 진보성향의 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인 만족도가 높았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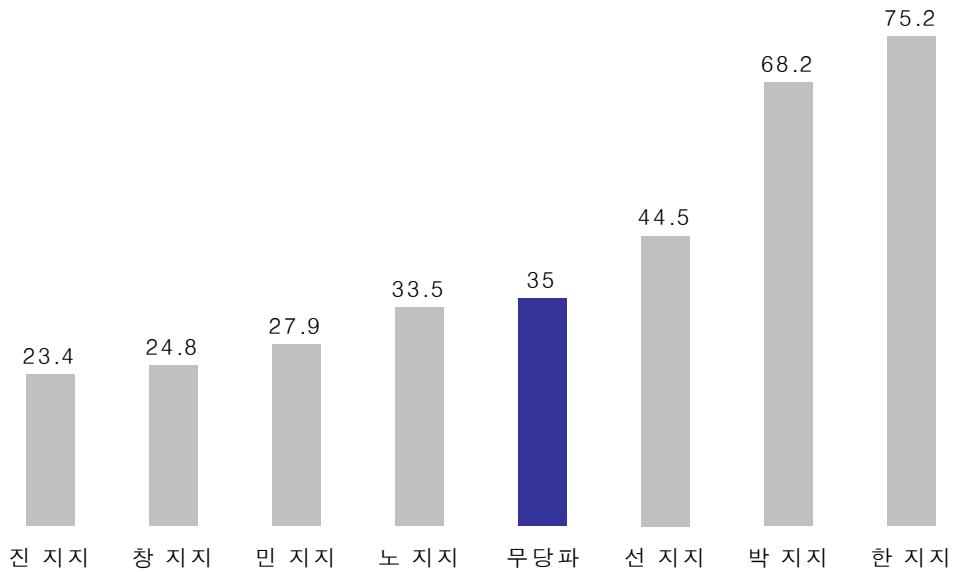
한편, 총선정국에서 견제론에 무게를 두고 있던 무당파 층의 경우 35%만이 선거결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선거결과 만족도



[그림 5] 지지정당별 선거만족도 “만족한다: 매우만족 + 대체로 만족” (%)



한지지=한나라당, 박지지=친박연대, 선지지=자유선진당, 노지지=민노당, 민지지=통합민주당 지지, 창지지=창조한국당, 진지지=진보신당



## 총선결과가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

### 1. 과반의석하의 여야 관계 전망 : 기대와 우려가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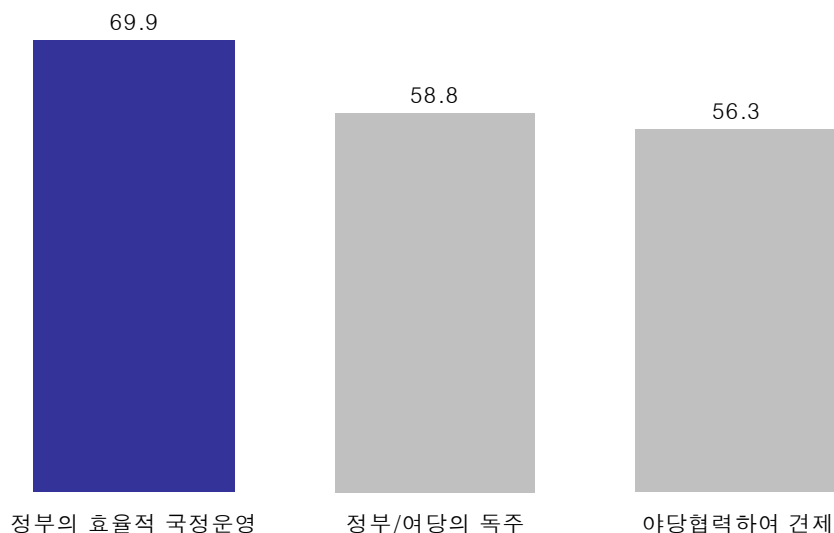
- 자유선진당/친박연대/무소속 지지자 정부와 국회협조를 통한 효율적 운영 기대감 높고
- 민주/민노 지지자 여당 독주 우려 높아
- 친박연대 지지층 “여야성향 공존”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로 끝난 총선이후 정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9.9%가 효율적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정부여당의 독주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58.8%가 우려스럽다고 대답했다. 즉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정부 및 여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민주노동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경우 효율적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과반수에 못 미쳤지만 이명박 정부과 정부가 독주할 것이 우려스럽다는 응답은 각각 82.6%, 92.3%에 달했다. 공천과정에서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탈당한 친박연대 혹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정부 독주에 대한 우려는 각각 57.1%, 62.3%로 민주/민노 등 타 야당에 비해 상당한 온도 차이를 느끼게 한다. 이들의 경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야당의 협조 하에 효율적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69.4%, 69.7%에 달했다.

즉 친박연대/자유선진당과 무소속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자들보다는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를 갖고 있어 야 성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총선이후 이명박 정부하에서 효율적 국정운영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 성향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방식에 따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무소속 지지자들은 지지기반으로 포섭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총선이후 정국 전망들에 대한 “동의” 비율(%)





[표 5] 총선투표별 총선이후 국정운영 전망(%)

		이명박 정부 효율적 국정운영 할 것			Total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총선 투표	통합민주당	143	125	7	275
		52.0%	45.5%	2.5%	100.0%
	한나라당	401	53	9	463
		86.6%	11.4%	1.9%	100.0%
	민주노동당	25	15	0	40
		62.5%	37.5%	.0%	100.0%
	자유선진당	27	8	2	37
		73.0%	21.6%	5.4%	100.0%
	창조한국당	4	3	0	7
		57.1%	42.9%	.0%	100.0%
	진보신당	7	9	0	16
		43.8%	56.3%	.0%	100.0%
	친박연대	34	14	1	49
		69.4%	28.6%	2.0%	100.0%
다른정당	1	1	0	2	
	50.0%	50.0%	.0%	100.0%	
무소속	53	21	2	76	
	69.7%	27.6%	2.6%	100.0%	
기권	105	65	9	179	
	58.7%	36.3%	5.0%	100.0%	
모름/ 무응답	6	4	0	10	
	60.0%	40.0%	.0%	100.0%	
Total		806	318	30	1154
		69.8%	27.6%	2.6%	100.0%

[표 6] 총선투표별 정부/여당의 독주 우려

		정부/여당의 독주 우려			Total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총선 투표	통합민주당	228	47	1	276
		82.6%	17.0%	.4%	100.0%
	한나라당	182	276	6	464
		39.2%	59.5%	1.3%	100.0%
	민주노동당	36	3	0	39
		92.3%	7.7%	.0%	100.0%
	자유선진당	21	16	1	38
		55.3%	42.1%	2.6%	100.0%
	창조한국당	6	1	0	7
		85.7%	14.3%	.0%	100.0%
	진보신당	10	6	0	16
		62.5%	37.5%	.0%	100.0%
	친박연대	28	18	3	49
		57.1%	36.7%	6.1%	100.0%
다른정당	1	1	0	2	
	50.0%	50.0%	.0%	100.0%	
무소속	48	29	0	77	
	62.3%	37.7%	.0%	100.0%	
기권	109	67	2	178	
	61.2%	37.6%	1.1%	100.0%	
모름/ 무응답	9	0	0	9	
	100.0%	.0%	.0%	100.0%	
Total		678	464	13	1155
		58.7%	40.2%	1.1%	100.0%



## 2. 향후 정계개편의 핵 : 한나라당 탈당파의 진로

- 한나라당 복귀 33.3%, 자유선진당과 통합 17.3%, 독자노선 27.2% 잘 모르겠다 22.2%
- TK vs PK 입장 차 뚜렷. 한나라당 복귀해야 TK 55.1%, PK 34.7%, 서울 28.8%

한나라당 지지자 57.1%, 친박연대 지지자 55.2%는 이들이 한나라당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자유선진당 지지자들(53.9%)은 자유선진당과 통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비전을 가진 독자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의견이나 자유선진당과 통합하기 바라는 의견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존재하고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의견까지 고려할 때 친박연대와 무소속의 한나라당 복귀를 내켜하지 않는 층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유권자 중 55%가 탈당파의 한나라당 복귀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경남 유권자들은 34.7%이 한나라당 복귀를 요구하여 경북 민심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경남의 민심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더 크게 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 28.8%, 인천경기 34.1%에서도 상대적으로 미온적임을 할 수 있다.

결국 박근혜 전대표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한나라당 복귀에 급지 않은 시선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박연대 및 무소속 한나라당 탈당파의 행보가 쉽지않은 양상을 보인다.

[표 7] 친박연대 혹은 무소속 당선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문 13] 정당 공천과정에서 탈락하여 친박연대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겠습니까?

Base=전체	사례수 (명)	한나라당 으로다시 돌아가야 한다	자유선진 당과한나 라당의의 의다다른 정당과통 합한다	독자적인 비전과정 책을가진 정당을만 들어야한 다	잘 모르겠다	계
		%	%	%	%	
■ 전체 ■	(1153)	33.3	17.3	27.2	22.2	100.0
○ 권역 ○	(247)	28.8	18.2	30.4	22.6	100.0
○ 인천 / 경기	(310)	34.1	13.4	26.4	26.0	100.0
○ 대전 / 충청	(116)	32.9	26.9	25.8	14.4	100.0
○ 광주 / 전라	(122)	18.2	21.9	33.0	26.9	100.0
○ 대구 / 경북	(123)	55.1	14.5	18.2	12.2	100.0
○ 부산 / 울산 / 경남	(187)	34.7	17.8	24.0	23.5	100.0
○ 제주 / 강원	(49)	29.3	9.5	38.9	22.3	100.0
○ 국정운영 지지자	(734)	46.8	12.3	21.6	19.3	100.0
○ 긍정 평가	(334)	6.2	27.9	40.9	24.9	100.0
○ 부정 / 무응답	(85)	23.5	19.1	21.1	36.2	100.0
○ 정당 지지자	(232)	10.2	26.0	36.1	27.8	100.0
○ 한나라당	(504)	57.1	8.3	16.2	18.4	100.0
○ 민주노총	(58)	6.1	41.9	35.0	17.0	100.0
○ 자유진보	(39)	10.0	53.9	17.9	18.2	100.0
○ 창조소	(65)	6.7	16.7	53.7	22.8	100.0
○ 진보신당	(38)	7.6	20.6	40.5	31.3	100.0
○ 친박연대	(80)	55.2	11.9	19.9	13.0	100.0
○ 다름 / 무응답	(3)	.0	24.1	52.2	23.7	100.0
○ 지지 정당 없음	(133)	10.8	17.9	40.0	31.3	100.0
○ 모름 / 무응답	(3)	.0	.0	.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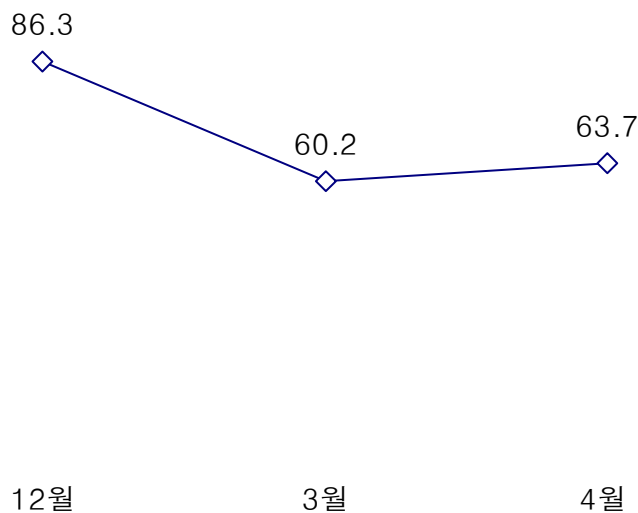
### 3. 총선이후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전망 : 기대와 우려의 공존

- 기대와 우려의 교차 : 국정지지 63.7%, 하락추세는 일단 멎어
- 세부영역에서는 비관적 전망 높아져 : 특히 경제양극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하락 커
- 이명박 정부 핵심정책에 대한 견제여론도 부담 : 일방적 정책 추진은 금물
  - 대운하 반대여론 급강화 57.9% → 66.6%
  - 한미FTA 재검토 여론도 여전히 높아

지난 대선 직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 기대가 86.6%에 달했지만 초기 인사정책과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 취임 한달도 안돼 60.2%로 내려앉았던 국정지지 하락추세가 일단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직후 조사에서는 63.7%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최근 민생 챙기기에 나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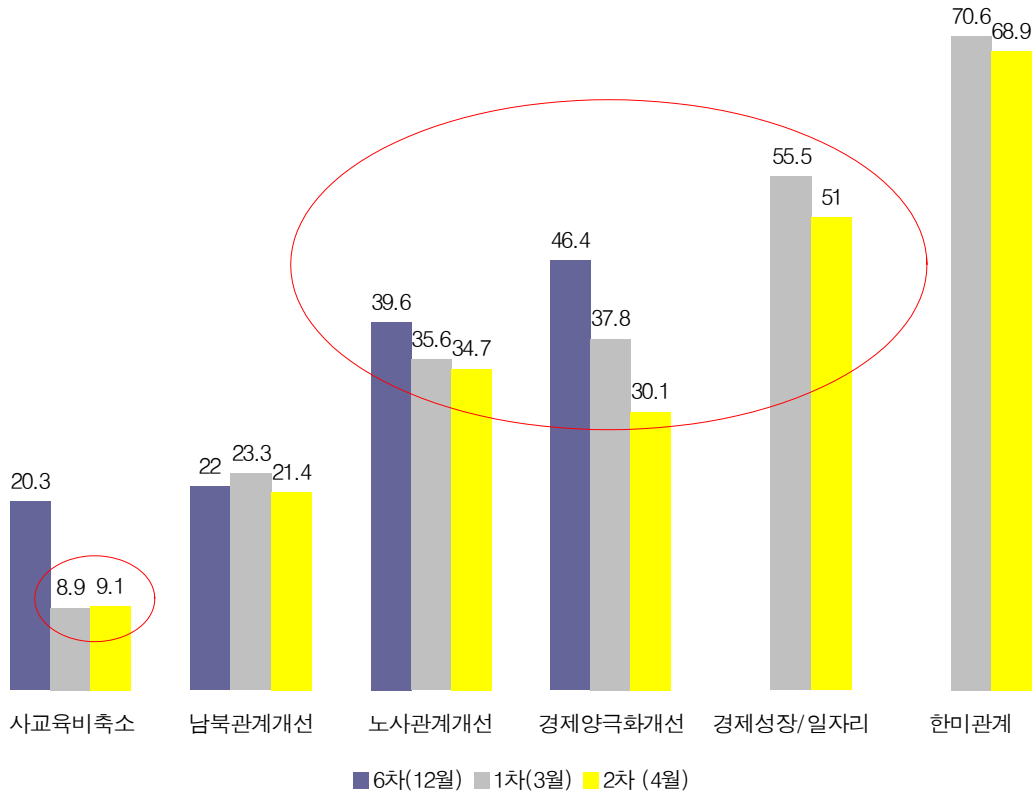
그러나 세부적인 영역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 급격한 전망 악화로 눈길을 끌었던 사교육비에 대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영역에서 비관적 전망이 눈길을 끈다. 우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영역에서는 여전히 과반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한 달 전에 비해 4.5%p 낮아졌고,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 역시 완만하게나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심각한 것은 경제양극화 문제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꺼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제양극화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12월 46.4%에서 총선직전 37.8%로 급강하더니 이번조사에서도 30.1%로 그제 줄고 있다. 현재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된 조건에서 대기업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 7]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 변화(%)





[그림 8] 세부 영역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변화



주1. 개선될 것, 악화될 것, 현상유지 응답 중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비율

□ 이명박 정부 핵심정책에 대한 견제여론도 부담 : 일방적 정책 추진은 금물

- 대운하 반대여론 급강화 57.9% → 66.6%
- 한미FTA 재검토 여론도 여전히 높아

총선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와 새 국회 초기 국정쟁점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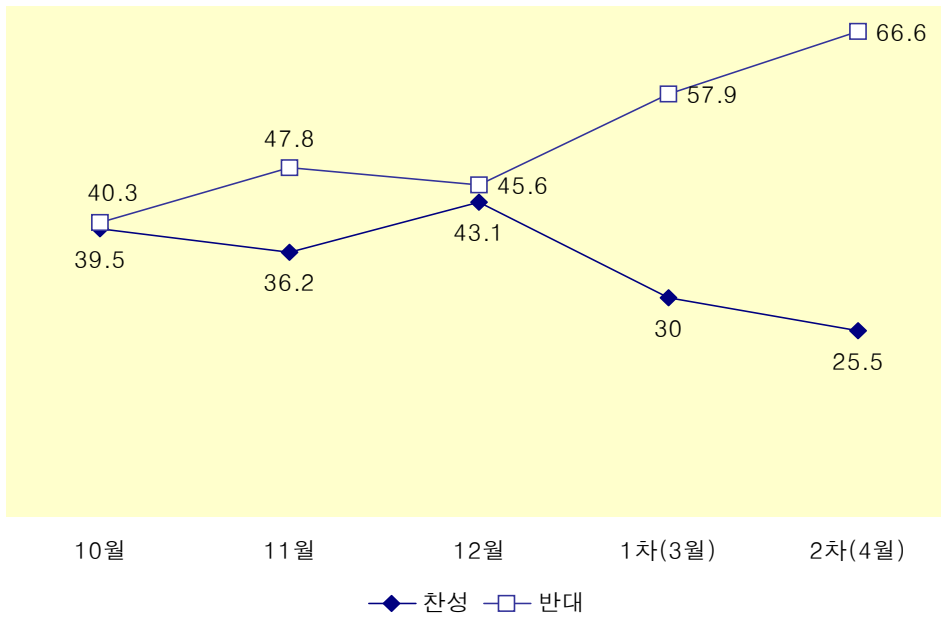
대운하건설에 대한 찬반여론을 살펴보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반대여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선패널 3차, 4차, 6차 조사가 실시된 지난해 10월 11월, 12월에는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었지만, 올 총선을 거치면서 3월 중순 조사에서 반대여론이 급기야 57.9%로 과반수를 넘더니 이번 총선직후 조사에서는 무려 66.6%가 반대한다고 응답을 했다.

한편 새 국회 출범 직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FTA 국회비준에 대해서는 대선패널 1차 조사가 실시된 1년 전 여론과 큰 변동이 없었다. 비준해야 한다는 여론은 34.2%에서 36.5%로 다소 상승하고,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은 6.9%에서 6.4%로 변화가 없었다. 다만 비준내용을 재검토하여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50%에서 48.8%로 거의 변화가 없어 여전히 국민들은 한미FTA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준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새 정부와 새 국회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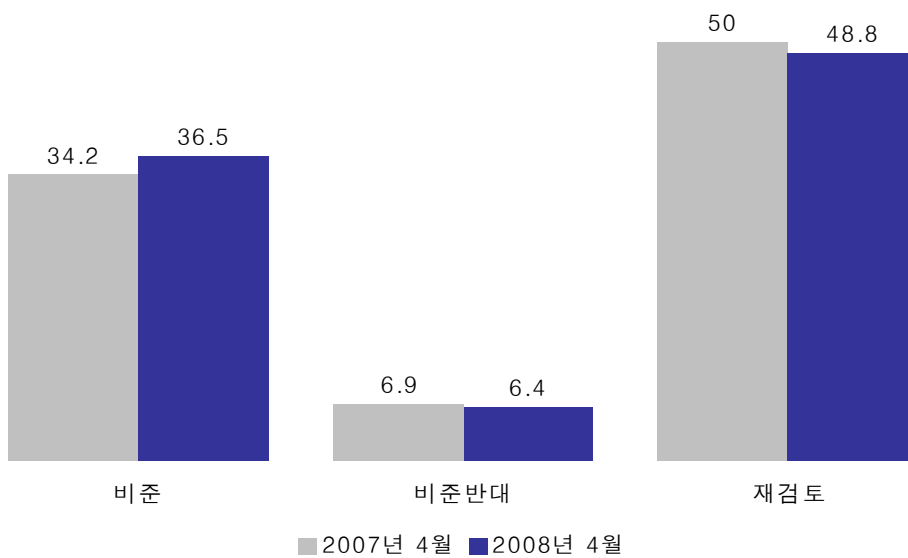




[그림 9] 한반도 대운하 찬반여론 변동



[그림 10] 한미FTA 국회비준 찬반여론 변화





#### 4. 총선이후 각당 정치인 호감도 조사

- 박근혜 전대표 6.4점으로 조사 대상 10인 중 가장 높은 호감도, 이명박 대통령 2위
- 이재오 후보 누른 문국현 후보 5.9점으로 높은 평가, 정몽준 5.4점
- 손학규 · 강금실 · 강재섭 · 권영길 · 이회창 · 정동영은 다소 비호감으로 평가

차기 정당별 지도자 호감도 조사결과는 총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각당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미지를 가능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매우 좋아하면 10점, 좋지도 싫지도 않으면 5점, 매우 싫어하면 0점으로 하여 0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한 각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평가점수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각 당의 대표를 비롯하여 이번 총선을 주도했던 10명의 정치인을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이번 총선의 최대수혜자로 꼽히고 있는 박근혜 대표의 경우 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6.2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재오 후보를 꺾으며 기염을 토했던 문국현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5.3점에 불과했지만 5.9점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정동영 후보와 맞대결을 펼쳐 승리한 정몽준 후보가 5.4점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전반적으로 호감을 주는 정치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이후 야당을 이끌어온 손학규 대표, 총선을 사실상 지휘한 강금실 후보의 경우 국민적 인지도에 비해 호감도는 썩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창원에서 노동자 대표로 재선에 성공한 권영길 의원,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 등은 평균 4.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기록하고 있다.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패배한 정동영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점수가 4.2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낮았다.

[표 8] 주요정치인 호감도 조사

	2007년 12월		2008년 4월
1. 이명박 ^^	5.8	1. 박근혜 ^^	6.4
2. 문국현 ^^	5.3	2. 이명박 ^^	6.2
3. 정동영 -.-	4.5	3. 문국현 ^^	5.9
3. 이회창 -.-	4.5	4. 정몽준 ^^	5.4
5. 권영길 -.-	4.2	5. 손학규 -.-	4.7
		6. 강금실 -,-	4.6
		7. 강재섭 -.-	4.4
		7. 권영길 -.-	4.4
		7. 이회창 -.-	4.4
		10. 정동영.-.-	4.2